

## 프랑스 고교생, 오늘도 거친 꿈을 꾸고 있나?

주 경 복 건국대 불어불문학과 교수

지난해 가을부터 프랑스 고교생들이 개혁에 가까운 교육환경개선 조건을 내세우며 거리로 나섰다. 언론매체에 보도되면서 잔잔한 파문을 일으켜 왔다. 대학생도 아닌 고교생들이 거국적으로 시위를 이끌어 간다는 것 자체가 우리 나라 사람들에게는 매우 의아함을 자아 내기에 충분한 소식이었다. 한 차례의 우발적 사건도 아니고 정부가 그들의 요구에 대처해 나가는 내용을 지켜 보면서 미흡한 점이 보일 때마다 지속적으로 행동에 옮겨 나가는 그들의 조직성에 더욱 놀라곤 하였다. 게다가 “교사 없이 미래 없다”, “교사 없이 학교 없다.”는 그들의 외침이 무언가 신선함을 주는 듯했다. 한 교실 안에서 30여 명을 초과하는 과밀수업이 없도록 교사를 적절히 충원하고, 필요 이상의 학습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과체계를 합리화하라는 것이 주요 쟁점이었다.

방법론상 학생수 제한이 꼭 필요한 외국어 과목에서도 50명 넘는 학습장이 흔해 빠진 우리 나라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그들이 외치는 것은 ‘배부른 투정’으로 여겨질 수도 있다. 하지만 프랑스 여론의 지지도가 말해 주듯이 이 유 없는 반항이나 철없는 주장은 아니었다. 어떤 부조리가 자신을 옥죄고 있으며,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비교적 정확히 깨닫고 내놓은 문제제기이며 대안제시인 것이다. 잡화점식으로 부과되는 학과 양의 과다함에 대한 개선요

구도 그냥 공부하기 싫으니 많이 놀려달라는 식의 유아적 발상은 아니었다. 우리 나라 고교생들이 볼 때는 낙원 같아 보이는 나라에서 더 좋은 천국을 바라는 주장 같아서, 만 세상에서 천사들이 벌이는 연극처럼 보일지도 모르지만, 그들에겐 진지한 논점이 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들 때문에 프랑스 고교생 시위에 대한 우리 나라 여론의 반응은 주로 ‘부럽다’, ‘신선한 충격이다’ 등으로 나타났다. 프랑스 청소년의 의식과 행동 수준이 놀랄 만 큼 성숙하며, 그들이 문제삼는 내용이 우리 현실에 비해 너무 행복한 고민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언론 보도의 초점이나 여론의 반응이 모두 그런 쪽으로 모아지곤 했다. 하지만 좀 더 객관적으로 뜯어보면 그렇게 부럽고 신선한 이야기만은 아니었다. 낙원 같아 보이는 곳에도 어두운 요소가 있으며, 프랑스 젊은이들의 의견 함 뒤에는 그들을 괴롭히는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일화 같은 감동이 아니라 교육문제의 복잡성과 난해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며 타산지석의 계기로 삼는 일이다.

프랑스에서 고교생 시위가 일어났다는 말은 프랑스 정부의 정책 자체에 문제가 있었거나, 아니면 그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거나, 아무튼 어떤 심각한 문제가 분명히 있었다는 이야기다. 다시 말해, 프랑스 교육

현실에도 부조리가 자리잡고 있다는 뜻이다. 결국 고교생 시위가 있었기에 부럽고 신선했다면, 논리적으로 볼 때, 그것이 없었더라면 더 부럽고 참신했어야 마땅할 것이다.

사실 프랑스 문화에는 곰팡이 냄새 나는 것들이 많이 있다. 오랜 시간 동안 묵어 온 것들이 적지 않게 남아 있는 것이다. 사소한 물건에서도 그렇지만 의식주, 일상습관, 행위 등 삶의 방식에도 그렇고 국가제도 안에도 그런 요소들이 때처럼 끼어 있다. 그런 것들 가운데는 장점이 되어 프랑스 문화를 값지게 하는 것도 있고, 단점이 되어 발전을 가로막는 것도 있다. 우리가 프랑스 사람들에게서 배울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들이 결과로 보여주는 걸 모습에서 막연히 부럽다거나 신선하다는 자극을 받는 일이 아니라, 그들이 당면과제를 속에서 목적을 가리기 위해 엮치락뒤치락하며 스스로의 방향을 찾아 나가는 과정일 것이다. 그들이 겪는 시행착오 가운데 드러나는 단점은 우리도 피해가고 장점이 될 만한 것을 지혜롭게 취사선택하여 참고로 하는 것이다.

요즘 학생시위와 관련하여 프랑스 교육 당국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교육현장의 애환을 함께 나누지 못하며 교육주체들 가운데 하나인 학생들의 목소리에 충분히 귀 기울이지 못하고 관료주의 구습에 젖어 있었던 데서 비롯한다. 좌우동거 정부를 이루고 있는 프랑스에서 내각은 사회당이 이끌고 있다. 대개 사회당은 우파 정당들에 비해 약자나 소수의 목소리에 비교적 호의적이라는 인식을 받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정당의 강령이나 정부의 정책이 민주와 진리를 선언하고 있더라도 임무를 수행하는 이들의 성실함이나 부지런함이 뒤따르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허울로 그치게 된다. 벌써 몇 차례 권력의 맛을 들인 프랑스 사회당 정부가 오늘날 프랑스 민중의 삶에 얼마나 밀착하여 고민하고 있느냐 하는 물음을 던져 보게 만드는 또 하나의 사건이 되고 말았다. 안일한 자세로 현장의 문

제를 간파하며 상의하달 방식의 행정편의로 접근하다가 결국 피끓는 예비 지성인들의 분노를 사고 만 것이다.

이 점은 우리 나라의 교육개혁 추진과정에서도 교훈으로 삼아야 할 중요한 사항이다. 우리 고교생들은 프랑스에서처럼 조직적이든 우발적이든 시위를 벌이며 교육정책을 비판할 역량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개념상으론 '수요자' 중심 정책의 '주체' 이지만, 현실적으론 '피교육자'의 위치만 강조되어 결국 '객체'의 자리에 전락해 있다. 대학생들도 정치적 시국문제에 주로 관심을 쏟던 과거의 조직들마저 이제는 와해 상태에 있고, 대중학생들이 교육문제에 집단적으로 의사표시를 할 만한 분위기가 마련돼 있지 못하다. 그렇다고 다른 교육주체인 학부모나 교원들의 세계에 비판역력이 조직적이며 건전하게 많이 형성돼 있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정책당국은 웬만해서 여론의 조직적 저항 없이 원하는 대로 일을 수행해 나갈 수 있다. 행정편의로 생각하면 그런 조건이 큰 일을 쉽게 해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기도 하지만, 사실은 가장 위험한 상태를 만들어 낼 수도 있는 양면성을 지닌다. 아무리 좋은 목표와 내용도 당사자들의 동의와 검증을 거쳐 합리적인 방법으로 실현해 나갈 때 바람직한 결과를 얻는 법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 나라의 교육개혁은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 짧은 기간에서 얻어낸 지혜로 타당성 검증이나 여론수렴의 충분한 절차 없이 목표가 세워지고, 일단 정해진 것은 선택과 자율의 여지없이 확일적 내용으로 굳어진 뒤에, 위에서 아래로 강제되는 일방통행 양상을 띠고 있다. 이는 한 번쯤 되짚어 볼 사항이다.

우리 사회는 해방공간에서 새로 권력분배를 이루는 과정에서 뚜렷한 개혁 없이 기득권 위주의 관성을 거의 그대로 꺼안고 출발하였다. 그 뒤로 어떤 분야든 자체개혁이 원천적으로 힘든 여건을 잉태하고 말았다. 개혁은 상당수 주체의 기득권 포기로 이어져 사실상 자발성을 일

으키기 힘든 것이다. 따라서 밑으로부터 또는 위로부터 아니면 아예 밖으로부터 어떤 현상타파의 강제된 힘에 어느 정도는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구조적 생리를 지닌다. 그런 점에서 요즘 교육부가 일부 학부모나 교원집단의 기득권 방어를 위한 저항에 유효하게 대처하며 개혁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일정한 합리적 원칙을 세워 객관적으로 강제해 나가는 방법에 상당부분 동의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제로 많은 문제점을 지닌 현행 개혁내용에도 불구하고 교육계의 뿌리에서부터 잔가지까지 세찬 바람을 휘몰아 뒤흔들어 냄으로써 단일한 기득권 유지나 고정관념 집착 현상을 씻어내고 있다는 점에서는 매우 긍정적 효과를 발휘하고 있음을 인정한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주체들의 기득권 집착의 포기 자발성 유도, 그리고 객관성 확보를 위한 전략적 차원에 그쳐야 한다. 그 이상의 인위성이 작용하여 세부진술에까지 관권이 군림하거나 새로운 기득권 세력 또는 이해집단의 횡포와 방종으로 몰아갈 경우는 반드시 부작용이 나타나고 개혁의 본질을 놓치고 만다. 요즘 이른바 '개혁 분위기'를 틈타 아무 것이나 기발한 것을 주장하며 새롭게 일을 벌이기만 하면 '개혁인사'가 되는 것처럼 위장하는 인물들이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진정한 개혁을 주장하는 사람이 저항 인물로 오인되고, 혼란을 틈타 새로운 기득권을 차지하거나 이기적 저의를 달성하려는 사람이 개혁의 선봉장으로 호도되는 일이 있는 것이다. 사실 많은 변수가 한꺼번에 중첩하고 있어서 어느 것이 옥이고 어느 것이 돌인지 가리기 힘들 때가 있다. 하지만 기준은 분명하다. 진정한 개혁에는 언제나 '개선'이라는 방향개념이 함의돼 있어야 한다. 개악도 개혁이라는 논리가 통용된다면 심각한 문제가 야기된다. 개혁의 당위성 자체를 다시 논의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개혁의 기제 안에는 스스로를 점검하는 자기검증장치가 내장되어야 한다.

같은 맥락의 이야기지만, 기득권도 없고 저항력도 없는 주체인 학생들의 목소리가 잠자고 있다고 하여 그들을 소외시켜서는 안 된다. 대개는 인간적 욕망에 이끌리기 쉬운 학부모의 주장만을 염두에 두면서 마치 그것이 수요자 전체의 목소리인 것처럼 싸잡아 취급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것은 큰 오류이다. 교육의 제1차 수요자는 학생이다. 온갖 요구사항만 분출하면서 자체의 변화에 무성의한 대다수 학부모가 아니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고뇌를 끌어안고도 침묵할 수밖에 없는 학생들이야말로 가장 배려해야 할 주체인 것이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며 그들을 위한 최선책이 무엇인지를 전제하고 나서, 교육당국은 스스로 주체의 몫까지 담당해 보겠다는 월권이나 만용을 드러내지 말고 학생, 교원, 학부모의 주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화시켜 당위성과 정통성이 갖춰진 개혁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사실 요즘의 지구촌 분위기로 볼 때, 한 나라의 울타리 안에 안주하여 기득권 다툼이나 하고 변화를 거부하기 위한 맹목적 비판이나 일삼고 있을 수는 없다. 각박해지는 국제관계와 사회생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때로 아픔도 감수하며 적응해 나가야 한다는 현실을 외면할 수 없다. 그것은 꼭 우리 나라만의 일이 아니다. 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들이 각종 개혁 프로그램을 추진하며 진통들을 겪고 있다. 국제경쟁 질서 안에서 최강의 자리를 누리고 있다는 미국도 예외는 아니다. 필자가 1년간('97. 8. ~ '98. 8.) 미국에 체류하면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미국의 교육제도에도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나 교육주체들의 불만과 비판이 적지 않았고, 정부와 교육기관들이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었다. 우리는 대개 미국제도의 긍정적 측면에만 눈길을 쏟으며 모방하려 하지만 미국은 거대한 제도로서 공룡화한 교육체계의 문제점들에 고심하며 신중히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때로는 우리가 버리려는 요소를 그들은 새롭게 도입해 보려 하거나, 우리가 그들로

부터 수입해 보려는 것을 그들은 버리거나 뜯어고치려 하는 등 역설적인 양상도 보인다.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여러 나라의 상황도 비슷하다.

결국 개혁을 위한 움직임의 겉모습은 비슷하지만 내용에서는 서로 많은 차이가 있기 마련이다. 나라마다 그리고 집단과 분야마다 개혁에 대한 개념정립에서 큰 차이를 보일 때가 많다. 어떻게 개혁하느냐에 따라 결과도 많이 다를 것이다. 자칫하면 역효과를 초래하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므로 개혁의 발목을 잡기 위한 소모적 논쟁은 지양하되, 우리 실정에서 가장 바람직한 지향점이 어디며 어떻게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합리적인 지에 대해 고통스러운 만큼 진지한 고민을 함께 나누어 나갈 필요가 있다.

지금 국제사회의 지배적 흐름을 이른바 '신자유주의'라고 규정하곤 한다. 그 용어의 개념이 얼마나 진리 값을 지니며 현실의 설명에 설득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도 생긴다. 다만 그것이 함의하는 것들 가운데 일부가 현실로서 우리 삶에 스며 있다는 것은 부정하고 싶지 않다. 그런 측면에서, 교육 분야도 어느 정도 그에 대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놓칠 수 없는 것은 어떤 조류가 있다고 해서 꼭 그것을 따라야 하느냐, 또는 어쩔 수 없이 전적으로나 부분적으로 그런 흐름을 따라야 하는 경우에 어떤 방식으로 따라야 하느냐 하는 문제의식이다. 정상적 사회라면 그것은 반드시 거쳐야 할 토론의 명제이다. 왜, 무엇을 할 것이냐 하는 성찰 없이 맹목적으로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이 점에 대해 우리 사회가 얼마나 자각하고 있는지 한 번쯤 반추해 볼 여지가 있다. 꼭 국민 전체는 아니라도, 교육개혁의 당국과 당사자들은 과연 검증된 철학이 있고, 뚜렷한 목적의식이 있으며, 목표가 분명한지 짚어 볼 만한 일이다.

지난 번 '문민정부' 때부터 주장된 개혁의 동기들 가

운데 눈에 띄는 것이 '세계화', '정보화', '경쟁력', '효율성', '수요자 중심', '인성교육' 따위이다. 이들 사이에는 그 자체의 가치론적 상충점이 보일 때가 있고, 특히 이들을 실현하기 위한 추진목표에는 더욱 함께 뭉뚱그리기 힘든 상충적 요소들이 적지 않게 들어 있어서 어떤 것이 최상위 가치인지 의아심을 일으키곤 했다. 그러나 따져 볼 겨를도 없이 곧바로 거센 바람이 되어 현장에 불어 닥쳤기 때문에 대부분의 당사자들은 주체의식을 가다듬을 엄두도 못 내고 손에 잡히는 대로 아무 것이나 붙들고 조금이라도 유리한 경쟁의 고지에 오르려고 발버둥치고 있는 모습이 되어가고 있다. 지금이라도 진실로 올바른 개혁을 열망하는 전문가들에게 과정 진단의 기회를 주어 향혜의 뜻대를 더 확실하게 세울 수 있다면 조금 늦었더라도 차선의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이른바 '신자유주의'는 퇴조하고 있는 느낌을 준다. 과거 대처 수상이 이끌던 영국 보수당의 일시적 성공에 대해 별로 높은 평가를 내리지 않고 있으며, 요즘 날로 심화되어 가는 미국 중심의 무한경쟁 질서에 의구심을 품고 있다. 우리 나라는 언제부터인가 발전 모델로서 미국을 설정하고 있는 듯하다. 그런 점에서 유럽의 입장은 우리에게 중요한 참고자료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어쩌면 과거의 영광에 비해 몰락한 귀족의 피해의식 정도로 치부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우리 나라는 미국의 제도를 직수입하여 조만간 유럽을 앞지르고 미국과 나란히 어깨를 겨루게 될 수 있을 것인가? 그 때 우리는 과연 유럽이나 중국처럼 상대적 독자성을 추구하던 나라들의 어리석음을 동정하며 우리의 발전논리를 미덕으로 권고해 줄 수 있게 되려는가? 아니면 혹시 유럽의 몸부림 속에는 우리가 함께 나눌 만한 고뇌들이 섞여 있는 것은 아닐까? 나아가 주체적으로 우리의 고유한 논리를 차근차근히 개발해 나갈 필요가 있는지는 않을까?

언제 개통한 것인지 모르지만 교육개혁의 '고속도로'가 뚫리고 나서부터는 토론 구도가 매우 단순화하는 경향이 있다. 게다가 어느 것이든 한 가지 논리가 채택되면 가급적 극단적으로 목표를 획일화하고는 눈 짝 감고 가속페달을 밟아버리는 식의 관행이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디론가 빨리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목적지를 제대로 정하여 사고 없이 제 시간에 다다르는 것이다. 고속도로야말로 한번 진입하면 회차하기 어렵고, 대형사고는 쉽게 난다는 상식을 되새겨 볼 만하다. **이영**

---

#### 주경복

프랑스 파리 5대학에서 언어과학 학사, 석사, 박사학위를 받았고 현재 건국대 언어불문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주요 저서로 『슬픈 열대의 구조주의자, 레비스트로스』 등이 있고 『언어과학의 거시적 관점에서 제기되는 구조 개념의 문제론』 외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였다.